韓 경제단체·기업총수 訪日 유력… 반도체 등 협력확대 전망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가 예정
최태원, 이재용, 신동빈 등 거론
게이단렌 협력 전경련 역할 기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을 비롯한 양국 단체 소속 회장단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한일 경제계가 오랜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협력 방안에 기대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모처럼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 일정에 참가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한일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8년 열렸던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경제 6단체 수장 참석이 유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한국 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특히 전경련 역할에 기대가 크다. 최근 일본 강제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미래 청년 기금'을 일본 경단련(게이단렌)과 함께 조성하는 임무를 맡은 데다가, 김병준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공약했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 설립이었기 때문. 최근 6개 단체가 낸 강제 징용 문제 합의 환영 성명에서도 모처럼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전경련은 게이단렌과 함께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주최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가를 검토하는 등 전경련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경제 단체 중에서는 일본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라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재계 회동에서는 민간 단체 총수들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아울러 한일경제협회장을 9년째 이어오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만남에서 양국 재계 인사들은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원론적인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추후 구체적인 협력 구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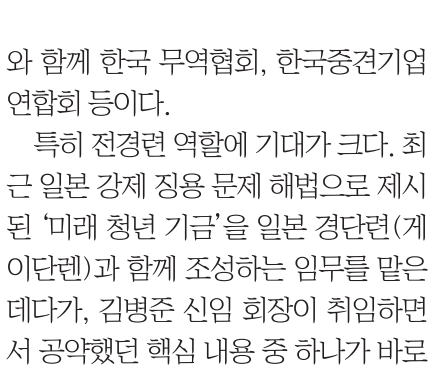
시급한 협력 분야로는 반도체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가 꼽힌다. 미국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기술 동맹을 본격화하는 상황, 대한민국만 홀로 남겨질 위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경제계가 화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에도 실제 협력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강제 징용 문제 합의와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 관계 회복은 당장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보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소외됐던 한국 산업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尹 "韓日 경제·안보 교류 절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미래 위한 결단"

대통령실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공개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 실천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특히,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2일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공개했다.

7일 진행된 국무회의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다음 날이자,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날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이번 방일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며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정책적 뒷받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편집한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새겨진 명패를 영상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리창 총리 선출… '시진핑 수행 vs 경제 사령탑' 역할론 엇갈려

차이나 뉴스&리포트

시 주석 집권기간 총리역할 크게 약화
핵심측근… 일부 재량권 허용 예측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신임 리창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시진핑 3기가 '시진핑-리창 체제'로 막을 올렸다.

앞으로 관건은 신임 리창 총리의 역할이다. 그저 시진핑 국가 주석의 복심을 읽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중국 경제를 살릴 경제사령탑으로 제 역할을 해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리창 상무위원은 국무총리로 선출됐다. 유효표 2947표 가운데 찬성 293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시 주석은 바로 리창을 총리로 임명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이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한 핵심 측근이다. 이후 저장성 성장과 장쑤성 당서기, 경제수도인 상하이 당서기 등으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특히 상하이 당서기 시절 테슬라 공장을 유치했으며,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과학창업판)을 출범시켰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유라시아그룹 에이바선 중국 및 동북아시아 담당자는 "리 총리의 가장 큰 도전은 올해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금융 리스크는 방어하면서 수요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원래 국무원 총리는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을 이끄는 '투톱'이었지만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총리의 역할은 상당 부분 약화됐다.

반면 시 주석이 신뢰를 바탕으로 오히려 일부 재량권을 신임 총리에게 허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리 총리는 전인대 폐막일인 13일 총리로서 첫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韓 균형외교에도 中 폐쇄조치 '적대적'

》1면 '韓美日 협력 급물살…'서 계속

중국 역사상 첫 시진핑의 3연임에도 빛이 바래는 분위기다. 시진핑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를 통해 만장일치로 주석에 선출, 2028년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총리 역시 최측근인 리창이 차지하며 종신 집권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확인했다. 그러나 안팎에서는 추락하는 경제에 대한 해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성장률 회복도 어려운 분위기다. 코로나19와 미국 무역 제재로 경제성장률이 3% 대에 그쳤지만, 올해에도 그렇다할 변화는 없다. 지난해 말 '리오프닝' 속에서도 스마트폰 등 현지 시장은 올 들어서도 여전히 침체일로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폐쇄적인 외교를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미국에 적대적인 대응을 이어감은 물론, 최근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를 대거 추가하면서도 한국을 뺐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태도. 한일 관계가 회복하면서 중국은 더욱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세계 외신들도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중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을 점치고,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진핑이 경제 침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집권을 위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이념화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시진핑은 최근 경제 위기를 미국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내부 결속을 꾀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